

정부, 경제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150건 연내 국회에 제출 계획

- 법제처, 23일 국무회의에서 '2024년도 정부입법계획' 보고 -

정부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안 등 29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50건의 법률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.

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'2024년도 정부입법계획'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.

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150건의 법률안 중 이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「장애인복지법」을 포함한 13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, 「전과법」 등 나머지 137건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에 제출할 계획이다.

입법 형식별로 살펴보면, 제정안은 「소비자안전기본법」 등 14건, 전부 개정안은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6건이며, 나머지 130건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.

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정부가 내건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 관련 주요 법률안>

연번	소관 부처	주요 법률안 및 내용
1	해양수산부	○ 「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- 정부가 운영해 온 바다내비 정보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
2	산업통상자원부	○ 「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」 -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3	행정안전부	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-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통한 피해 지역의 조기 안정 지원
4	국방부	○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- 군사기지·시설 주변 지역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여건 마련

이완규 처장은 “올해는 22대 국회 개원 등으로 입법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”라고 전망하면서, “정부입법이 보다 체계적이고,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: 1. 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

2.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

담당 부서	법제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최성희	(044-200-6561)
		담당자	사무관	김치영	(044-200-6565)

붙임 1

부처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 현황

(법률안 수)

국회제출 계획 소관 부처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
국무조정실						1							1
기획재정부	1								23			1	25
교육부										1	1		2
과학기술정보통신부						3	1	1				1	6
외교부									2			1	3
통일부								1		1			2
법무부	4	5				1				2			12
국방부							1				3	3	7
행정안전부						3	1		4	6			14
국가보훈부						3			1		8	1	13
문화체육관광부							1			2			3
농림축산식품부							1	2	2	1	1		7
산업통상자원부									1	1	1		3
보건복지부		1								1		1	3
환경부											1	2	3
고용노동부							1		2			3	6
여성가족부		2											2
국토교통부								1			1		2
해양수산부						3		2	2			2	9
중소벤처기업부								2			2		4
식품의약품안전처							3						3
방송통신위원회										1			1
공정거래위원회							1			1		3	5
금융위원회									1			1	2
국민권익위원회								1		1		1	3
원자력안전위원회								1				1	2
대통령경호처								1					1
국가정보원							1					1	2
국가인권위원회							1						1
(공통)과기부·행안부												1	1
(공통)과기부·방통위										1		1	2
합 계	5	8	-	-	-	14	12	12	38	19	18	24	150

붙임 2

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국무조정실(1건)						
1	청년기본법	일부	○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폐지 ○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및 임기 변경	4월	6월	공포 후 6개월
□ 기획재정부(25건)						
1	부담금관리 기본법	일부	○ 관리대상 부담금의 정비 및 통합	'23년 10월	1월	공포일
2	개별소비세법	일부	○ 개별소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3	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과세자료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4	관세법	일부	○ 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5	관세사법	일부	○ 관세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6	교육세법	일부	○ 교육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7	교통·에너지· 환경세법	일부	○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8	국세기본법	일부	○ 국세기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9	국세징수법	일부	○ 국세징수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0	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 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1	농어촌특별세법	일부	○ 농어촌특별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2	법인세법	일부	○ 법인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3	부가가치세법	일부	○ 부가가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14	상속세 및 증여세법	일부	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5	세무사법	일부	○ 세무사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6	소득세법	일부	○ 소득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7	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	일부	○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8	인지세법	일부	○ 인지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19	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0	조세특례제한법	일부	○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1	종합부동산세법	일부	○ 종합부동산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2	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주류면허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3	주세법	일부	○ 주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4	증권거래세법	일부	○ 증권거래세법 규정 합리화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	8월	9월	'25.1.1.
25	(가칭)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 지식공유사업에 관한 법률	제정	○ 대외경제 전략 이행지원 및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국제지식공유사업의 정의·목적 명확화 및 운영 체계화	10월	12월	공포 후 6개월
□ 교육부(2건)						
1	인성교육진흥법	일부	○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폐지	8월	10월	공포 후 6개월
2	유아교육법	일부	○ 유아교육 진흥원의 업무에 보호자 교육 지원 근거 신설 ○ 영유아 보호자 대상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실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근거 신설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(6건)						
1	전파법1	일부	○ 주파수 할당 관련 위법 사유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부과 근거 마련	3월	6월	공포 후 6개월
2	(가칭) 국가 연구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	제정	○ 국가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·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생성, 수집, 관리, 활용 등에 관한 사항	3월	6월	공포 후 1년
3	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	전부	○ 국가 전반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	4월	6월	공포 후 6개월
4	우편법	일부	○ 우편물 운송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과의 관계 명확화	5월	7월	공포일
5	방송법1	일부	○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에서 지역상품의 소개·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허용	6월	8월	공포 후 6개월
6	전파법2	일부	○ 안정적인 망 운용 능력을 갖춘 통신 사업자의 무선국 개설 절차를 완화하는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	10월	12월	공포 후 6개월
□ 외교부(3건)						
1	여권법	일부	○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 신설 ○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2	한국국제교류재단법	일부	○ 국제교류기여금 납부의무자를 위한 법령상 권리 구제절차 마련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3	외무공무원법	일부	○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	10월	12월	공포일
□ 통일부(2건)						
1	남 북 교 류 협 력 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정 기간의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○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	6월	8월	공포 후 6개월
2	(가칭) 통일기반 조성법	제정	○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명문화 ○ 통일기반조성기본계획 수립 ○ 통일기반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	8월	10월	공포 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법무부(12건)						
1	아동 학대 범 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	일부	○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○ 피해아동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등	'23년 10월	1월	공포 후 6개월
2	성 폭 력 범 죄 자 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활성화	'23년 10월	1월	공포 후 6개월 ~2년
3	고 위험 성 폭 력 범 죄 자 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	제정	○ 고 위험 성 폭 력 범 죄 자 에 대 한 거주지 지정	'23년 10월	1월	공포 후 6개월 ~2년
4	난민법	일부	○ '국가안전보장' 등의 난민불인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○ 난민불인정 대상자에 대한 난민인정 취소, 철회 근거 마련	1월	1월	공포일
5	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6	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7	아 동 학 대 범 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8	특 정 강 력 범 죄 의 처 벌 에 관 한 특 례 법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 ○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,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9	형사소송법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10	공증인법	일부	○ '전자공정증서의 작성'에 관한 규정 신설 ○ 전자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된 지정 공증인의 부수적 사무에 대한 위임 및 준용 규정 마련	4월	6월	공포일
11	(가칭) 교도관직무 집행법	제정	○ 직무수행 중 발생한 교정사고에 대한 감면 규정 마련 ○ 교도관회의 등 위원회 근거 규정 명시	6월	10월	공포 후 6개월
12	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음란물 등 교정·교화 저해 서적 반입 제한	6월	10월	공포 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국방부(7건)						
1	병역법	일부	○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연령 등 세부 연기 요건의 위임근거 마련 ○ 병역진로설계사업의 근거 신설	5월	7월	공포 후 6개월
2	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 자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감염병감시 지원정보체계 구축·운영 근거 마련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3	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	일부	○ 항공작전기지의 보호구역 지정 기준을 일반 군사기지와 동일하게 적용 ○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금지 또는 제한사항 재정립 ○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군 협의건에 대한 협의기간 단축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4	군인사법	일부	○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대 ○ 임관 후 귀책사유 발생에 따른 단기 복무장려금의 환수 규정 마련	9월	11월	공포일
5	(가칭) 국방종합 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	제정	○ 국방종합훈련장 설치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에 필요한 사항	9월	12월	공포 후 6개월
6	국 방 · 군 사 시 설 사업에 관한 법률	일부	○ ‘민·군상생 지역(가칭)’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	10월	12월	공포 후 6개월
7	군인연금법	일부	○ 퇴역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및 지급정지 기간의 계산 등 규정 명확화	10월	12월	공포일
□ 행정안전부(14건)						
1	위험물안전관리법	일부	○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등록의무 및 정기점검 실시 근거 마련 ○ 무등록 위험물시설 점검업자 벌칙 규정 신설	4월	6월	공포 후 2년
2	자연재해대책법	일부	○ 가뭄피해 예방대책 수립의 근거 마련 ○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및 관리 제도 실효성 강화	4월	6월	공포 후 6개월
3	지방교부세법	일부	○ 교부세 교부시기를 1년에 4기 이상으로 하여 실무상 교부시기와 법 규정을 일치 ○ 지방교부세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	4월	6월	공포일

연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4	비상대비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비상대비훈련의 근거 및 종류 규정 ○ 비상대비훈련 종류별 실시권자·승인권자 명시 ○ 비상대비훈련 대상 현실화	5월	7월	공포 후 3개월
5	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기록물의 디지털 생산·관리 원칙 확립 ○ 기록물 이관·분류·평가·폐기 등 절차 재설계 ○ 기록물 유형별 제도 개선 등	6월	9월	공포 후 6개월
6	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	일부	○ 지방자치단체 법정무기금의 설치 근거를 지방기금법으로 한정 ○ 성과 미흡 기금 등의 통·폐합 권고 근거 마련 등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7	지방재정법	일부	○ 지방자치단체 법정무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지방재정법으로 한정 ○ 특별회계 성과분석 근거 마련 ○ 지방채 발행 대상에 '경상적 경비' 추가 등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8	지방회계법	일부	○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조정교부금 및 법정무기금 전출, 채무상환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 처리절차 마련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9	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	일부	○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○ 특별재난지역 신속 선포를 위한 절차 개선	8월	10월	공포 후 1년
10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체납처분 절차 명확화 ○ 지방세외수입 징수 효율성 제고	9월	10월	'25.1.1.
11	지방세기본법	일부	○ 납세의무 확정, 승계, 환급 제도개선 등 과세 형평성 제고 ○ 불복청구, 경정청구 등 납세자 보호 ○ 세무조사 등 과세권 강화 ○ 과세정보 및 과제자료 관리	9월	10월	'25.1.1.
12	지방세법	일부	○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○ 취득세, 재산세, 지방소득세,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·형평성 제고	9월	10월	'25.1.1.
13	지방세징수법	일부	○ 지방세 체납징수 합리성·효율성 강화 ○ 납세자 납세편익 제고, 지자체 징수 지원	9월	10월	'25.1.1.
14	지방세특례제한법	일부	○ 지방세 지출 적정 관리, 합리적 재설계 * ('24년 일몰) 국가유공자, 임대사업자, 학교, 분할합병, 법인·공장 지방이전 등 ○ 감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·개선	9월	10월	'25.1.1.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국가보훈부(13건)						
1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	일부	○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 · 재산 기준 삭제	4월	6월	'25.1.1.
2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	일부	○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 · 재산 기준 삭제	4월	6월	'25.1.1.
3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1	일부	○ 생활조정수당 지급여부 결정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 소득 · 재산 기준 삭제	4월	6월	'25.1.1.
4	국가보훈 기본법	일부	○ 지자체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권고안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	7월	9월	공포일
5	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6	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등록 신청 이전에 국적을 상실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7	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외국국적 동포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8	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9	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○ 외국국적동포인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	9월	11월	'25.10.1.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10	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11	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12	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의료지원 관련 조문을 국가유공자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 ○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	9월	11월	'25.10.1.
13	(가칭)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	제정	○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또는 고손자녀의 영주귀국 목적 국내 정착 지원	9월	12월	공포 후 1년
□ 문화체육관광부(3건)						
1	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등록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를 국외 반출 가능 사유에 추가	5월	7월	공포 후 3개월
2	관광진흥법	일부	○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	8월	10월	공포일
3	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	일부	○ 과징금 체납처분 기준 명확화	8월	10월	공포일
□ 농림축산식품부(7건)						
1	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우수 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	4월	7월	공포 후 6개월
2	농어촌정비법	일부	○ 신고확인증 분실 등의 경우 사업자의 재교부 신청 근거 마련 ○ 농어촌민박 변경신고 대상을 신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한정	5월	8월	공포일
3	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절차 삭제 ○ 지자체장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관련 개발·보급 근거 마련	5월	8월	공포일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4	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자조금관리위원회의 품목별 자율 수급 조절 근거 및 방법 규정	6월	9월	공포 후 1년
5	식물방역법	일부	○ 우편·특송품 수입자의 검역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○ 해외여행객 대상 식물검역 유의사항 및 검역신고 안내 근거 마련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6	가축전염병 예방법	일부	○ 방역위반으로 사육제한·폐쇄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체 근거 마련 ○ 검역창고 보관관리인 및 사육관리인 지정 기준, 지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	8월	10월	공포 후 6개월
7	사료관리법	일부	○ 사료공정 위반행위나 사료의 함량·혼합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 근거 마련 ○ 보조사료의 개념 정의 확대	9월	11월	공포일
□ 산업통상자원부(3건)						
1	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	전부	○ 기술이전 방식 자율화,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등 기술이전·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○ 사업화 투자 유인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 신설 등 사업화 지원 기반 강화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2	(가칭) 수소 및 수소화합물사업법	제정	○ 생산, 수출입, 판매 등 유통단계별 수소 사업자 정의 및 인허가 기준 마련 ○ 금지행위, 벌칙 등 사용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규정 마련	8월	10월	공포 후 1년
3	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	일부	○ 개발계획 변경 등 지자체 자율권 강화 ○ 기업지원 강화 및 개발 관련 규제 완화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□ 보건복지부(3건)						
1	장애인복지법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2	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방안 마련 ○ 노숙인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근거 마련	8월	10월	공포 후 1년
3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전부	○ 감염병 감시체계 정비 ○ 입원 및 격리 요건 명확화, 시설동원의 근거 정비	10월	12월	공포 후 1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환경부(3건)						
1	하천법	일부	○ 하천수사용 제한 또는 허가수량 조정 내용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2	기상관측표준화법	일부	○ 간이형 기상측기의 성능인증제도 도입 ○ 지자체 관측시설 운영·관리 지원 방안 마련 등	9월	12월	공포 후 2년
3	수도권매립지관리 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관련 사항 개선	9월	12월	공포일
□ 고용노동부(6건)						
1	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업재활법	일부	○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 ○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 시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변경 ○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의 이의 신청 절차 마련	5월	7월	공포 후 6개월
2	근로기준법	일부	○ 근로시간 제도 개선 *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일정은 노·사·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할 예정	6월	9월	공포 후 6개월
3	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	일부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점검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	7월	9월	공포일
4	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	일부	○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연금성 강화 등	10월	12월	공포 후 1년
5	고용보험법	전부	○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 으로 개편(현 근로시간)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	10월	12월	공포 후 2년
6	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	전부	○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득기반 으로 개편(현 근로시간)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	10월	12월	공포 후 2년
□ 여성가족부(2건)						
1	아 동 · 청 소 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2	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피해자 재판기록 등 열람·등사권 강화	1월	2월	공포 후 3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국토교통부(2건)						
1	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	일부	○ 행정조사 시 사전통지 예외규정 도입 ○ 조합임원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규정 신설	6월	8월	공포 후 6개월
2	항공사업법	일부	○ 보험사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마련	8월	11월	공포 후 6개월
□ 해양수산부(9건)						
1	수산업협동조합법	일부	○ 지구별수협의 외부전문가 감사 요건 명확화 ○ 지구별수협의 임원 결격사유 명확화 ○ 어촌계의 설립, 사업 및 해산 관련 규정 신설	4월	6월	공포 후 6개월
2	어선법	일부	○ 어선건조업 등록, 등록 취소 및 관련 처분 규정 신설 ○ 어선건조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	4월	6월	공포 후 1년
3	어선안전조업법	일부	○ 어선의 위치통지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	4월	6월	공포 후 1년
4	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공공기관의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확대 ○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마리나정거장 시설 포함 ○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수중레저사업 등록 의제 신설	6월	8월	공포 후 1년
5	지능형 해상교통 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	일부	○ 디지털 선박 건·개조 근거, 등급기준 및 등급 인증절차 마련 ○ 민간기업의 바다내비 서비스 개발· 제공 참여 보장 ○ 해양 디지털·통신 장비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체결제도 마련 등	6월	8월	공포일
6	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친환경선박·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○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융자금을 지원 받은 친환경선박·기자재 구매자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	6월	9월	공포 후 6개월
7	수상에서의 수색 · 구조 등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해상조난사고통계 작성·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○ 수상구조사 결격사유 완화 및 개인정보 수집 목적·절차의 명확화 ○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의무보험 보호 강화	7월	9월	공포 후 1년

연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8	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규제 개선	9월	12월	공포 후 6개월
9	수산업·어촌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소규모어가 직불제 및 어선원 직불제를 '기본형 직불제'로 규정 ○ 경영이양·수산자원보호·친환경수산물생산 직불제 등을 '선택형 직불제'로 규정	10월	12월	공포 후 1년
□ 중소벤처기업부(4건)						
1	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	일부	○ 법률상 어려운 용어 정비	6월	8월	공포일
2	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	6월	8월	'25.1.1.
3	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개인투자조합·창업기획자·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·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 명확화	9월	11월	공포 후 6개월
4	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	일부	○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수립시 공유지에 대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 산정기준 정비	9월	11월	공포일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3건)						
1	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	일부	○ 일본식 용어,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 * (대상법률)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, 식품 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	3월	7월	공포일
2	약사법	일부	○ 일본식 용어,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	3월	7월	공포일
3	위생용품 관리법	일부	○ 일본식 용어, 전문 용어 등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	3월	7월	공포일
□ 방송통신위원회(1건)						
1	방송법 ²	일부	○ 방송광고 기본원칙 신설 및 모든 방송 광고 유형을 허용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○ 공영방송의 재허가제도를 대체하는 공적책무 부과 및 이행점검·평가 체계 도입	8월	10월	공포 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공정거래위원회(5건)						
1	(가칭) 분쟁조정 통합법	제정	○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 및 조정절차 등 통합 ○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상임 위원, 간이조정, 감정·자문 제도 등 도입	3월	7월	공포 후 1년
2	(가칭) 소비자안전 기본법	제정	○ 현행 소비자기본법 상의 소비자안전 센터, 위해정보 수집 등 소비자 안전 관련 사항을 소비자안전기본법에서 규정 ○ 소비자 안전정보 통합 제공 및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 근거 명시	8월	10월	공포 후 1년
3	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	10월	12월	공포 후 1년
4	소비자기본법	일부	○ 소비자분쟁조정 간이조정절차 신설	10월	12월	공포일
5	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	일부	○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금액 최대 한도 상한 마련	10월	12월	공포일
□ 금융위원회(2건)						
1	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	일부	○ 기업신용등급제공업에 대한 진입규제 합리화 ○ 신용평가검증위원회 검증대상에 기업 신용조회회사의 평가모형 검증 추가	7월	9월	공포 후 6개월
2	공인회계사법	일부	○ 한자표기 법률 한글화	10월	12월	공포일
□ 국민권익위원회(3건)						
1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외부강의등 신고기간 연장, 신고 제외 외부강의등 확대 등 신고의무 완화	6월	8월	공포 후 6개월
2	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	일부	○ 법 위반행위 신고 송부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	8월	10월	공포 후 6개월
3	행정심판법	일부	○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통합행정 심판기구 설치	9월	12월	공포 후 1년
□ 원자력안전위원회(2건)						
1	원자력안전법1	일부	○ 행정처분 기간 중 방사선이용기관의 사업폐지 금지 ○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○ 방사선안전 기본교육 실시주체 명확화	6월	8월	공포 후 6개월
2	원자력안전법2	일부	○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정비	10월	12월	공포 후 6개월

연 번	법률명	제·개정 구분	주요내용	추진일정		
				법제처 제출	국회 제출	시행일
□ 대통령경호처(1건)						
1	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	일부	○ 유·무선통신망, 전파 등을 이용한 기술적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등 대통령집무실, 관저 및 경호구역에 대한 안전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	6월	8월	공포일
□ 국가정보원(2건)						
1	(가칭) 국가안보 기술연구원법	제정	○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	4월	7월	공포 후 6개월
2	(가칭) 국가사이버 안보기본법	제정	○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법령에 따라 예방·대응활동을 수행하고 필요시 유관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	10월	12월	공포 후 6개월
□ 국가인권위원회(1건)						
1	국가인권위원회법	일부	○ 인사 독립성 및 자율성 제고	5월	7월	공포 후 3개월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행정안전부(1건)						
1	(가칭) 민·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	제정	○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체계 마련 ○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제도·특례 ○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기반 조성	9월	12월	공포 후 6개월
□ 과학기술정보통신부·방송통신위원회(2건)						
1	(가칭) 통합미디어법	제정	○ 플랫폼, 콘텐츠 등 기능을 기준으로 수평적 분류체계 도입 및 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규율체계 마련 ○ 방송규제 완화 및 미디어산업 지원 근거 마련	8월	10월	공포 후 1년
2	전기통신사업법	전부	○ 용어, 목적, 장·절 구조 등 체계 개편 ○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기제조업 겸업승인 제도 폐지 등 규제 개선 ○ 필수설비 개방제도의 범위 확대	10월	12월	공포 후 1년